

## 일본의 생활정치의 과제와 전망

박 희 숙\*

이 논문은 일본의 '생활정치'의 전개과정과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전후 일본인의 생활보수주의는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주민운동과 혁신자치체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생활정치가 등장하게 된다. 기존의 정당정치와 사상운동과는 명확하게 거리를 둔 '베헤렌 운동'은 생활정치가 지역을 넘어서 보편적 과제로 확대되는 계기였다. 또한 1980년대이후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참가의 형태로 진행된 '생활자 정치'는 1990년대 전성기를 구가하지만 2000년 이후 정체 상태이다. 한편 생활정치에 대한 이론은 1980년대의 '라이브리 폴리틱스'와 '생활자 민주주의', 그리고 1990년대의 '생활자'에 대한 개념 규명, 2000년대 생활보장체계를 둘러싼 '라이프 폴리틱스'의 흐름으로 전개된다. 최근의 민주당의 집권은 생활보수주의에 의한 문제해결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생활정치와 정당정치와의 접합을 보여주고 있으나 민주당의 문제해결능력은 불투명하다.

주제어: 생활정치, 생활자 정치, 생활자 민주주의, 라이브리 폴리틱스

\* 아사히카와대학 보건복지학부

##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일본의 ‘생활정치’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生活政治’라는 용어가 사용된 예는 거의 없다. 그 대신에 ‘라이브리 폴리틱스’, ‘생활자 정치’ ‘생활자 민주주의’ ‘생활권 정치’, ‘라이프 폴리틱스’ 등 ‘생활정치’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그러한 다양한 용어들이 ‘생활정치’라는 틀로 총괄된 적은 없다.

일본의 ‘생활정치’를 논할 때는 ‘생활자 정치’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생활정치’를 ‘생활자 정치’와 동일화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럴 경우 ‘생활정치’의 다양한 현상들이 감추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생활자 정치’는 ‘생활정치’의 대표적인 예이지만 ‘생활정치’는 ‘생활자 정치’보다 훨씬 넓고 긴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생활정치’를 이미 경계가 확정된 영역으로 보기 보다는 ‘생활정치’라는 용어를 통해 다양한 현상들을 하나로 이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생각하는 ‘생활정치’의 공간과 의미는 일본의 사례와 접근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독자들은 ‘생활정치’의 일본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각의 맥락을 풍부하게 읽어냄으로써 생활정치가 갖는 보편성과 지역적 고유성을 발견해내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먼저 1절에서는 전후 일본인의 생활보수주의와 정당정치를 개괄한다. 다음 2절에서는 일본의 생활정치에 대해 이론적인 검토를 한다. 그리고 3절에서는 생활정치와 관련된 사례들을 통해 생활정치의 전개 과정과 과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 최근의 일본의 정권교체와 관련해서 생활정치의 전망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 2. 전후 일본인의 생활보수주의와 정당정치

1956년 7월 일본정부의 내각부(전 경제기획청)가 발표한 경제백서의 “이미 ‘전후’가 아니다”라는 부제는 일약 유행어가 되었다. 일본국민들은 이 말을 일본이 드디어 부흥기를 벗어나서 고도성장이라는 밝은 미래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일본 경제는 1956년부터 1973년까지 평균 성장률 9.1%를 계속했다. 1974년부터 1990년까지는 평균 4.2%, 그중 8년간은 10%를 넘는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성장률은 1.0%, 버블경제가 붕괴된 1993년에 처음으로 -0.5%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08년 경제성장률은 -3.2%로서,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후 최대의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1955년은 일본에서 ‘55년 체제’가 성립한 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병하여 자민당이 출현했다. 같은 해에 좌우로 분열되어있던 사회당도 통일되어 전후의 정치적 혼란을 벗어나 양대 정당이 정비되었다. 이 정당시스템을 ‘55년 체제’라고 한다.

1960년 안보투쟁을 경과하며 일본은 정치의 계절이 지나고 경제의 계절로 접어든다. ‘국민소득 배증계획’이란 1960년 이케다(池田)내각에서 책정된 장기경제계획이다. 이 계획은 1961년부터 10년간 실질 국민소득(국민총생산)을 당시의 배인 26조 엔까지 증가시킨다는 것이었다. 그 후 일본 경제는 경이적으로 성장했다. 실질 국민 총생산은 약 6년만에, 국민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은 7년(1967년)만에 배증을 달성했다.

1972년 다나카 카쿠에 수상은 ‘일본열도개조론’을 주창했다. 일본열도를 고속철도와 신칸센으로 연결하여 지방의 공업화를 촉진하고 과소와 과밀, 그리고 공해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열도개조론'에 의해 개발 후보지가 된 지역에서는 토지의 매점이 가속화되었고 지가가 급속히 상승했다. 이 영향으로 물가가 상승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1973년은 일본에서 '복지원년'으로 불린다. 70세 이상의 노인의료비에 대하여 본인 부담분 30%를 지자체가 대신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노인의료비의 무상화가 실현되었다.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가족의 의료비중 보험 부담이 50%에서 70%로 인상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혁신자치체의 선진적인 복지정책을 정부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10월 석유파동은 물가와 경제의 혼란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고, '광란물가'의 상황을 연출했다. 수출제품의 코스트도 상승해서 기업의 업적은 떨어졌고 월급 상승이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활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1974년 조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2.6% 증가에 그쳤고, 1975년에는 -9.1%로 떨어졌다. '복지원년'은 수정을 요구받았고, 1976년 이후 사회보장 지출의 신장률은 둔화되는데 비해 공공사업비는 1979년부터 20% 이상씩 늘어났다. '복지국가' 보다는 '토건국가'를 선택한 것이다.

자민당의 장기집권요인으로는 1960년대에서 80년대의 경제발전이 결과한 국민들의 생활보수주의가 있다. 전후일본은 경제부흥, 경제성장이라는 국가 목표를 추구하면서 외교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속에서 미국시장에 공업제품을 파는 경제성장노선을 추구해왔다. 이것은 일본 정치의 자명한 전제였기에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정당이나 정치가가 선택지를 제시하여 국민이 선택하는 경험은 거의 없었다. 자민당은 경제성장의 촉진과 부의 평등한 분배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일정 정도 교묘하게 양립시켰다. 그 장치로서 민간부문에서는 장기안정고용과 연공임금 하에 노동자에게도 부가 배분되었다. 공공부문은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도 공공투자, 농업이나 유통업등의 촉진센터

에 대한 보조, 보호등의 정책을 전개했다. 저생산성부문에서도 고용이 확보되었고 사회는 평준화되었다. 1980년대에는 소위 1억 ‘총중류사회’가 이루어졌다(山口二郎 2009, 120). 이러한 ‘신중간대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자민당정권에 의한 재분배정책의 수혜자이자 기득권자이다. 기득이익 때문에 그들은 자민당 정권을 지지하였고, 이러한 의식은 생활보수주의를 형성했다.

또한, 그때까지도 체제선택론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일본인들에게 사회당으로의 정권교체는 자유주의 체제의 붕괴를 의미했다. 냉전론적 사고가 국민에게 깊이 침투해 있었던 것은 사회당측에도 문제가 있었다. 당시 사회당은 여전히 시장경제와 의회제 민주주의에 대해 입장이 불투명했으며 1970년대까지도 당내에서는 영국의 노동당과 같은 사회민주주의는 배격되었다(山口二郎 2009, 117-118). 1979년 중의원 선거 여론 조사에서 ‘정권담당능력을 가진 정당’으로 자민당을 선택한 비율은 71.8%였던 반면 사회당의 지지 이유로 ‘정권담당능력’을 선택한 비율은 7.7%에 지나지 않았다(小林良彰 1997). 사회당 지지자조차 사회당의 정권담당능력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인한 세입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 공채 의존률은 30%를 넘어 1988년 GNP에서 장기공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를 넘게 되었다. 더 이상 부채재정을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78년부터 79년에 걸쳐 일반소비세의 도입을, 80년에는 그린 카드제의 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81년 이후 수년간은 ‘증세없는 재정재건’을 슬로건으로 행정개혁을 계속했다. 87년, 88년에는 매상세 도입에 좌절했고, 89년 겨우 소비세 도입에 성공했다. “조세개혁은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모든 이익집단의 사활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행정개혁은 정치세력에게는 조세를 압도하는 충격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문제로서 민

간(경제)집단에게는 남의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辻中豊 1988, 173-174). 1989년 말 주가는 피크가 되었고 90년대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정체에 빠졌다. 자민당의 특기인 이익배분의 가능성도 협소해졌다.

냉전구조가 무너지면서 자민당을 통합해온 외적 압력은 저하된다. 체제선택론도, 보수정당을 묶어냈던 ‘반공’도 효력을 잃었다. 이제는 자민당이 아니어도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90년대 전반에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고양되었다. 소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새로운 정치주체를 만들어 내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여겨졌고, 92년 등장한 일본신당이나 자민당 내 신당운동에 국민의 기대가 모아졌다. 1993년 6월 정치개혁에 실패한 미야자와 내각에 대해 중의원불신임안이 가결되어 7월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일본신당, 신생당, 자민당 내 비둘기파 그룹이 결성한 신당 사키가케가 약진하고 사회당은 격감했다. 비자민 세력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결과 호소카와 연립정권이 탄생했다. 이 연립정권은 7당 1회파로 구성된 불안정 정권으로 유일한 접착제는 ‘정치개혁’이었다. 국민들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권교체에 흥분하였고 호소카와 정권은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정치개혁법안을 성립시킨 후 이 정권은 실추되었고 1년도 채 안되어 호소카와 수상은 퇴진한다. 호소카와 정권의 탄생에 의해 처음으로 야당이 된 자민당은 사회당과 손잡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 자민당은 세력을 회복하였고 1996년 발족한 하시모토정권은 재정건전화정책을 내걸었으나 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하고 무너졌다. 1999년 자민당은 자유당, 공명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했다. 자유당은 2000년 3월 연립을 탈퇴하면서, 그때부터 공명당은 자민당의 유일한 파트너가 되어 ‘자공연립’을 지탱한다.

2000년대 일본의 가장 큰 변화는 고용의 불안정화가 가져온 생활의

불안이었다. 구조조정, 다운사이징이 일반화되고 종신고용은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2001년 발족한 코이즈미 정권은 개혁을 주창하여 자민당은 개혁정당을 자칭했다. 코이즈미 정권이 추진했던 구조개혁노선은 민영화, 규제완화, 세출억제 및 삭감이었다. 이것은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려는 경제계의 리더들에게는 환영받았다. 반면, 종래의 고용이나 공공사업 체제 속에서 일자리와 생활을 확보해온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익의 박탈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을 부수고 개혁하겠다’는 슬로건은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었고, 코이즈미는 2003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재선했다. 총재선거의 여세를 몰아 코이즈미는 10월 중의원을 해산하여 11월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자민당의 구조개혁에 대결하는 노선으로서 ‘생활제1’이라는 슬로건을 구축했다. 2003년 총선거에서 칸 나오토가 지휘하는 민주당은 정권정책을 명확히 하는 매니페스토 선거를 내걸었다. 형식상으로는 사회보장, 경제, 고용 등의 과제에 관하여 각당이 거시적 정책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선거전이 이루어졌다. 자민당은 237석을 획득하여 정권을 유지했다. 한편 선거직전 자유당과 합당한 민주당은 177석을 획득하여 야당으로서는 전후정치사상 최대의 세력이 되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의 득표로는 자민당을 상회했다. 공산당과 사민당은 참패했다. 그 결과 1996년 소선거구제 도입 후 10년 만에 일본에서도 양대 정당제를 향해 군소 정당의 도태가 진전되었다는 관측도 보였다(石川眞澄 2004, 209).

2003년 6월 하순부터 코이즈미 정권 및 자민당에 대한 여론은 일변하여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최대의 이유는 연금개혁에 대한 코이즈미 정권의 무리한 수법에 국민이 반발하면서 불안을 느꼈기 때문이다. 2002년 국민연금 납부율은 과거 최저수준인 62.8%였다.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확대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담의 점증, 급부의 삭감을 축으로 하는 연금개혁법을 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강경 체결했다. 법안 성립 후에 장래의 연금제도의 설계의 토대가 되는 출생율이 크게 저하한 사실이 공표되었고 이것은 연금제도에 대한 불안에 박차를 가했다”(石川眞澄 2004, 211). 2006년 아베 수상이 취임했으나 2007년 여름 사회보험청이 관리하는 연금보험료 납부 기록중 누가 납부했는가가 불명확한 기록이 5천 건에 달한다는 문제가 불거 터졌다. 국민들은 분노했으나 아베 수상과 자민당은 그 대응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조차 했다. 결국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대패했고 아베수상이 9월 사임한 뒤 후쿠다 수상이 취임했으나 1년을 못 채우고 2008년 9월 사임, 아소수상이 취임한다. 그리고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역사상 유래없이 참패한다. 일본국민의 생활의 불안이 더 이상 자민당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 3. 일본의 생활정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

2절에서는 일본의 생활정치의 이론으로 등장했던 ‘라이브리 폴리틱스’, ‘생활자 민주주의’, ‘생활자론’, ‘라이프 폴리틱스’의 개념과 문제의식, 그러한 이론들이 상정하고 있는 생활정치의 내용을 분석한다.

#### 1) 라이브리 폴리틱스: ‘생’과 ‘생활’에 관한 정치

일본의 생활정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효시는 1980년대 등장한 라이브리 폴리틱스(lively politics)이다. 시민참가의 대표적 이론가인 시노하라 하지메(篠原一)는 1983년 라이브리 폴리틱스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그는 라이브리 폴리틱스를 하이 폴리틱스(high politics)에 대립되는 것으로 보았고, 그 예로 70년대 이후의 에콜로지 운동, 자자관리운동, 지방분권, 지역·민족자치, 페미니즘, 원자력발전반대운동 등을 생각했다.

시노하라는 라이브리 폴리틱스를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치 발전 과정의 필연적인 산물로서 인식했다. 기성정당이 주도하는 하이폴리틱스의 시대, 고도성장과 더불어 물질적 이익이 지상가치가 된 이익정치의 시대, 그리고 1970년을 경계로 한 포스트물질주의, 즉 라이브리 폴리틱스의 시대(篠原一 1985, 5)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시노하라는 라이브리 폴리틱스를 정당정치나 이익정치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았다. 기존 정당은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나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익정치는 공해나 도시문제를 발생시켰다. 라이브리 폴리틱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篠原一 1985, 6-7)이었다.

시노하라는 라이브리 폴리틱스를 ‘생과 생활에 관련된 활력에 넘친 정치’로 정의한다. ‘생활하다’와 ‘살다’를 live의 본원적인 개념으로 보면서 생활의 일상성과 생명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라이브리 lively는 ‘활기찬’으로 번역된다. 라이브리 폴리틱스는 내용상으로는 ①생활에 관련된 정치, ②생에 관한 정치를 의미하며, ③‘활력에 넘친’ 정치 스타일을 말한다. 라이브리 폴리틱스는 조직의 톱니바퀴로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플레이도 아닌 연대하며 활기차게 행동하는 정치 스타일이다(篠原一 1985, 9). ‘생활’에 관한 정치는 이제까지의 운동이 생산과정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었던 것을 반성하며 소비과정, 폐기과정, 자연순환과정과 관련한 운동들로 전개된다. 또한 ‘생’에 관한 정치는 생명, 장애인, 삶의 보람과 가치, 인류 전체의 생존에 관한 문제를 포괄한다. 시노하라는 80년대의 신보수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라이브리 폴리틱스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시노하라가 라이브리 폴리틱스에 대해 낙관만 했던 것은 아니다. 라이브리 폴리틱스는 GNP의 확대와 같이 단순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라이브리 폴리틱스의 영역으로 분출되는 요구의 대부분은 지방자치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금까지 생활과 생에 관한 정치는 단일쟁점주의 운동으로 전개됨으로써 운동별로 독특한 스타일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요구들은 정당 형태로는 흡수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지만 연대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시노하라의 독일의 ‘더 그린’을 정당이 아닌 다양한 시민운동의 결집이라는 점에서 라이브 폴리틱스로 간주했다.

시노하라가 일본의 라이브 폴리틱스의 예로 들고 있는 것은 1983년 홋카이도 도지사선거에서 처음 등장한 ‘캣테렌’ 시민선거, 그리고 1983년 이후 카나가와현 즈시시의 미군주택건설 반대를 위한 주민운동이다. 1983년 홋카이도 도지사선거에서 출현한 ‘캣테렌’ 선거는 일본의 시민선거의 원형이다. 캣테렌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들은 ‘제멋대로’(캣테니) 연대한다”고 말했다. 캣테렌은 “정치의 과제는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장(생활)에 스며 있다!”, “한 사람이라도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의 태도’를 표명하며 행동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캣테렌 선거가 이전의 선거와 달랐던 것은 무거운 정치, 경직된 이데올로기, 직업적인 정치를 부정하면서 보통사람들의 정치, 축제와 같은 선거를 연출했다는 점이다.

시노하라가 라이브리 폴리틱스로 든 또 하나의 예는 카나가와현 즈시시의 시민운동이었다. 즈시에서는 ‘이케고(지명) 미군주택에 반대하여 자연과 어린이를 지키는 모임’을 결성하여 주민투표조례 직접청구, 시장 리콜 운동, 그리고 시민운동에서 배출한 시장후보가 당선함으로써 눈부신 운동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운동의 특징은 중심적인 주체의 90%가 여성이었다는 것인데 그들의 평균연령은 43세였다. 그들은

전후민주주의 교육의 세례를 받은 세대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절대적인 리더를 만들지 않고 각자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자기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지향했다.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준 리더들의 자발성과 연대성에 의해 운동이 지탱되었다. 운동참여자인 주부 3명이 도미하여 와인버거 국방장관에게 서명을 전하고, 국제안전보장국 일본과장으로부터 “무리해서 이케고에 집착할 생각은 없다.”는 중요한 발언을 끌어내기도 했다. 운동을 통해 지자체 시장을 배출했고, 시민파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이 의회로 진출했다.

그러나 미국주택건설반대는 일미안보조약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의 자치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표면적으로는 자연보호와 어린이를 내세우고 있지만 근저에는 정치적인 긴장을 유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미안보조약을 정면으로 내걸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의 여성들이 주체가 될 수 있었고, 운동은 처음부터 장벽에 부딪치지 않고 발전할 수 있었다. 즈시의 운동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침해하는 문제로 미군주택문제를 받아들였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항했으나 결국 숲, 어린이, 자연보호와 같은 생활정치적 과제들은 일미안보조약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또한 즈시의 운동에서 “〈주부〉라는 운동의 자기규정은 개개인의 삶의 방식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 합의해서 모인, 지극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개인의 생활제일주의라는 ‘표준형’을 제시”(森元孝 1996, 327)하여 즈시의 운동이 ‘큰’ 정치로 전개되는 것을 봉쇄했다. 즈시의 시민운동은 생활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 2) 생활자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항력

시게모리 아키라(重森曉)는 1992년 ‘생활자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소유자 민주주의(=시장적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주주의(=비시장적 민주주의)는 서로 대항관계에 있다고 생각했고, 생활자 민주주의는 소유자민주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자 민주주의가 발전한 형태를 의미했다. 이때의 생활자는, ①노동하고 소비하고 통치하는 주체. ②다양한 인간적 활동을 통하여 그 잠재적 능력을 무한히 발휘하고 발달시키는 주체. ③자본이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인격. ④자립적인 개인들이 자유로운 연대와 공감 속에서 활동하는 존재(重森曉 1992, 168-169)를 의미한다.

시게모리는 생활자 민주주의의 객관적 기반으로서 현대의 정보화, 도시화, 국제화를 든다. 생활자 민주주의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간 규제와 단축, 자유시간 확대와 생애학습의 보장 등으로 인간다운 노동과 생활을 중시하는 직장만들기. 둘째, 어린이, 고령자, 여성의 생활 시점으로부터 도시만들기. 셋째, 다국적기업의 규제 및 각국의 경제적 주권에 기반한 신국제경제질서의 확립(重森曉 1992, 181-182).

시게모리는 80년대의 민간부문의 강화, 즉 민간활력론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품고 있었으며 그 대안으로서 생활자 민주주의를 제창한다. 85년 전기·전화공사, 전매공사가 민영화되었고, 87년 국철이 JR로 7분할되어 민영화되었다. 이때부터 도시재개발에 민간자원이 활발하게 도입되기 시작했다. 중앙정부는 ①민간사업부문에서의 시장과 경쟁 원리의 발휘, ②개인생활부문에서의 자립과 자조원리의 강조, ③사회집단부문에서의 자조와 연대 원리의 조장을 내걸었다. 그 방책으로 ①행정개입의 완화·경감·폐지, 소위 규제완화, ②행정이 처리·경영해오던 사무와 사업의 민영화, ③기간공공시설의 민간에 의한 건설·관리, ④복지, 문화, 교육 등에서의 자립과 자조 원리의 강화, ⑤행정운영에 대한

민간적 경영수법의 도입 등을 제시했다. 생활자 민주주의는 민영화(privatization)에 비판적이고 기업의 민주화(democratization)를 요구했다. 시게모리는 생활자 민주주의를 근대의 시민국가와 복지국가에 대한 대안이자 신자유주의에 대항력으로서 기대했다(重森曉 1992, 199).

시게모리의 ‘생활자’는 자립적이고 주체적이며 연대속에서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강한 개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생활자 민주주의는 노동자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유자 민주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게모리는 어떤 실체속에서 생활자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일까? 시게모리는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보육운동,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는 극장, 장애자를 위한 공동작업소, 생활협동조합운동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공통적으로 ‘어린이의 성장을 바라는 엄마의 활동’이다. “아직 ‘노동부인(=여성)’의 운동과 ‘전업주부’의 운동과의 사이에는 일종의 단절과 같은 상황이 보이지만, 이것들은 전체로서 지역이나 행정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重森曉 1992, 177)는 것이다. 시게모리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에게 생활자로서의 발달을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게모리에게 있어서 ‘생활자’란 실체라기보다는 모든 인간이 도달해야 할 최고의 발달단계이다. 그런데 그러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시게모리는 생활자 민주주의를 규범적 시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자의 실체도 생활자 민주주의의 가능성도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게 된다. 도대체 생활자란 누구인가?

### 3) ‘생활자’란 누구인가?

아마노 마사코(天野正子)는 『생활자란 누구인가-자율적 시민상의 계보』(1996)에서 계보학적인 시점에서 생활자의 상을 드러내고 있다. 시대의 유행어로 정착한 ‘생활자’는 문맥에 따라서 ‘부엌감각(살림감각)’이나 ‘주부감각’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서민감각’을 나타낼 때도 있고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기도 한다. 1989년 소비세 도입 이후, 1990년 중의원선거에서 ‘생활자 주체의 정치’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나온 이후 ‘생활자’는 정치혁신의 키워드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공명당은 특히 정당의 이미지 용어로서 ‘생활자’를 선거포스터에 다용했다. ‘생활자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공명당의 호소에서 생활자는 소비세 반대로 상징되는 생활방위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결집의 심볼이었다. 이때의 생활자는 ‘소비자’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다. 1993년 도쿄도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일본신당이 ‘생활자를 우선하는 마을 만들기’를 주장하며 ‘생활자’를 전면에 내걸었다. 일본신당의 공인후보자의 3분의 2는 타당으로부터 이당한 사람들로 명확한 정치강령도 없이 단지 모여있을 뿐인 상태에서 생활자는 참으로 편리한 단어였다. 여기서 생활자란 ‘생활하고 있는 도민’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정당이탈이 진전되고 정당지지가 애매해지는 가운데 선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무당파층이다. 후보자에게 있어 무당파층은 동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유동적인 무당파층을 듣기 좋은 ‘생활자’로 명명함으로써 안심감을 얻으려 하는 정치가들 사이의 경쟁(天野正子 1996, 3-4)에 의해 ‘생활자’는 정치의 키워드로 부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1992년에 이미 생활자는 미야자와 수상의 자문기관이던 경제심의회 의 답신 「생활대국 5개년개획-지구사회와의 공존을 위하여」에서 키워드로 사용되었다. “정부는 기업중심에서 생활자·소비자의 시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활자와 소비자

의 차이는 명확하지 않다. 1996년에는 생활자의 시점에서 10년 후의 「생활도시 도쿄를 생각하는 모임」이 도지사의 사적자문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생활도시 도쿄’ 선언은 아오시마 도지사가 추진하는 신정책의 주력상품이었다. 여기서의 생활자란 ‘여유와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도민’ ‘도정에 참여하여 제안하는 도민’ ‘자주적, 자립적으로 행동하는 도민’이다. 생활자는 ‘도쿄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즉 도민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天野正子 1996, 6).

생활자라는 단어는 기업에까지 진출했다. 경기후퇴로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든 80년대 말경부터 ‘생활자에 친절한 기업’을 선전문구로 사용하는 기업이 늘어났다. 여기의 생활자도 소비자로 바꾸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아마노는 ‘생활자’가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걸친 시기(天野正子 1996, 7)라고 분석했다. 그것은 생활자가 ‘부적과 같은 기능을 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냉전구조가 종식된 후 생활자나 생활이라는 단어의 가치가 높아졌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하는 선택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 무너지고 자신의 주장이나 이익을 자유롭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스스로를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발견하기 못했다. ‘생활’이 붙은 단어는 이데올로기나 정치, 경제, 외교와 같은 거대담론이 포기된 후 그를 대체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마노가 생활자라는 단어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자가 다용되는 배경에는 일본사회의 구조가 명백하게 ‘생산자’ 우위에 치우쳐 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생산면에서 보면 구미선진국을 따라잡았는데 일본인의 생활에서 왜 여유가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문, 풍요로운 사회속에 도시문제, 환경, 안전, 자원문제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에 대한 불안, 효

율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짜여진 경제사회의 이곳저곳이 삐걱거리고 있다는 실감이 그것이다. 생활자란 일본사회에 대한 반성과 의문, 불안과 예감이 교차하는 혼돈 속에서 생겨난 사람들의 바램과 기대가 담겨진 유행어로서 시사점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특히 생활자는 단지 감각 차원이 아니라 행동원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노가 ‘생활자’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은 생활클럽 생협이 운동이다. 이 운동에서 생활자는 첫째, 생산현장으로부터 발언하는 ‘노동자’나 소비의 장에서 발언하는 ‘소비자’에 대치하여 그 둘을 포함한 전체로서 생활의 장으로부터 발상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다. 둘째, 생활자는 ‘개인’에 뿌리를 두면서 다른 ‘개인’과의 협동에 의해 이제까지 자명시 되어왔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대안적인 생활방식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이다. 결국 생활자는 생활의 전체성을 파악하는 주체이며, 정적인 형식으로가 아니라 ‘생활자’로 삶의 방식을 바꾸어가는 하나의 역동적인 일상적 실천이다(天野正子 1996, 13-14). 아마노는 생활자가 되는 과정 전체를 하나의 운동으로서 위치지우면서 생활자 운동 전체를 일관되고 철저하게 실천한 것은 생활클럽 생협 집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자 운동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활문화론이나 소비사회론, 새로운 사회운동론등과 통한다고 주장했다.

#### 4) 라이프 폴리틱스: 생활형성과 생활보장을 위한 재분배의 정치

일본의 생활보장체계에 대하여, ‘국가가 담당하는 역할이 작고, 가족복지와 기업복지가 강하게 상호보완작용을 하고 있으며, 제3섹터의 규모가 작고 성별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특징들은 일본의 생활보장체계가 남성 생계부양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오사와 마리는 분석했다(오사와 마리 2009, 65). 남성 생계부양자형 생활보장체계에서는 장년층 남성에게 안정적인 고용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시장이 규제된다(하지만 모든 남성에게 안정적인 직장과 가족임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전제로 남성이 돈벌이 능력을 상실할 위험에 대비해 사회보험이 정비되고 가족구성원은 세대주에 부속된 존재로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가정책임은 부인이 풀타임으로 수행할 것이 기대되며, 이를 지원하는 보육, 개호 등의 서비스는 저소득이거나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된다'(오사와 마리 2009, 65).

이러한 '일본형 복지사회'의 남성생계부양자형은 특히 1980년대에 강화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의 지구화 및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현저하게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생활보장체계는 재구축되지 않고 기존 유형 그대로 작동함으로써 오히려 안전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오사와 마리 2009, 83).

이러한 생활보장체계의 기능부전과 역기능 속에서, 미야모토 타로(宮本太郎)는 라이프 폴리틱스를 제기한다. 라이프 폴리틱스란 복지정책의 새로운 영역으로 생활의 형식 그 자체에 관한 정치를 말한다. '생활의 형식에 관한 정치'는 첫째, 가족의 형식과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재정의, 둘째, 몸과 마음의 약화에 대한 케어, 셋째, 생활과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가족 친화적 혹은 워크 라이프 밸런스로 불리움), 넷째, 문화, 종교, 성적 지향성 등과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의 상호승인 등을 둘러싼 정치를 의미한다(宮本太郎 2008).

미야모토가 말하는 라이프 폴리틱스는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를 둘러싼 정치이며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 없이 새로운 생활형성은 불가

능하다는 것이다. 커뮤니티나 가족의 자명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 형식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에 라이프 폴리틱스의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커뮤니티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강화, 성적 마이너리티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지금 살기 힘든 것이 가족내의 남녀, 부모 자식간의 역할관계나 도덕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보고 전통적인 가족이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복권하자는 주장이다. 그들은 전통적 가치에 따른 도덕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처럼 라이프 폴리틱스는 라이프 스타일을 둘러싼 정치입과 동시에 때로는 서로 다른 가족관, 생활관, 도덕관의 대립양상을 노정한다. 이러한 대립은 재분배를 둘러싼 복지정치와 같이 예산적 조치에 의해 타협하기는 어렵다. 보다 직감적이고 정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충돌로 발전할 수도 있다(宮本太郎 2008).

일본에서 라이프 폴리틱스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젠더 평등에 관한 정책 전개와 그에 대한 반동이라고 미야모토는 분석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는 이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이 전개되었다. 1996년 ‘선택적 부부별성’ 도입을 포함한 민법개정, 2001년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젠더 평등을 둘러싼 라이프 폴리틱스는 일찍부터 국정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정책가운데 법안으로 성립한 것은 대부분 국회를 통과했다. 많은 보수정치가들은 젠더평등이나 가정내 폭력방지를 요구하는 정책을 인간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련의 법률이 제정되자 보수계의 미디어나 단체로부터는 전통적인 가족상을 옹호하며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남녀공동참회사회기본법의 가결·시행을 경과하며 2002년 전후부터 이런 움직임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신문이나 캠페인과 연계해서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보수계 의원이 젠더정책을 비판하는 논의들

강화했다(宮本太郎 2008).

그러나 라이프 폴리틱스가 젠더정치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라이프 폴리틱스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나 사람들이 살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포함하여 복지나 고용제도를 조정해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라이프 폴리틱스는 데모크라시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케어나 간호 서비스와 같은 생활형성을 위한 데모크라시는 그 성격상 행정주도에 의해 위로부터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당사자, 가족 등은 참고 참다가 목소리를 내게 되고, 전문가, 자조그룹, 비영리조직이 이것을 지지하여 행정, 케어 워커 등이 협력하여 해결의 길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라이프 폴리틱스는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이며 지역 사회의 활력이나 발전과 연결될 수 있다. 가족의 양태, 남성과 여성의 역할 등의 라이프 폴리틱스는 직접적인 정치, 감정 과다의 정치로 전개될 위험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해결의 전망과 결부되면 공공공간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라이프 폴리틱스의 가능성을 살려 사람들의 사회 참여를 다양한 형태를 실현하는 제도적 조건은 이미 복지국가라는 틀 속에서는 불가능하고 복지거버넌스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宮本太郎 2008).

미야모토는 라이프 폴리틱스를 ‘생활형성과 생활보장을 위한 재분배의 정치’로 정의한다. 여기서는 이미 주체나 과제를 특정할 수 없다. 생활을 둘러싼 문제들이 드러나는 공간은 갈등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문제해결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결국 그러한 공간에서 서로 부대끼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토의, 갈등, 대립, 그리고 협동을 통해 재분배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4. 일본의 생활정치의 전개과정과 과제

생활정치에 대한 이론이 포괄하는 것보다 ‘생활정치’의 현상들이 출현한 것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된다. 3절에서는 주민운동과 혁신자치체를 생활정치의 시점에서 고찰하고, 60년대의 ‘베헤렌’ 운동을 생활정치로 위치지운다. 그리고 80년대 이후 활성화된 ‘생활자 네트워크’의 사례를 고찰한다.

##### 1) 고도경제성장의 쌍생아: 주민운동과 혁신자치체

일본에서 주민운동과 혁신자치체가 봄처럼 확대되었던 시기는 일지한다. 일본의 주민운동은 1960-70년대에 피크를 이루었고, 80년대의 ‘겨울의 시대’를 거쳐 90년대 이후는 NPO나 볼룬티어, 주민투표와 같은 형태로 재연되고 있다(中澤秀雄·樋口直人 2004, 140). 전후 일본의 지방정치도 기본적으로는 보수가 지배했지만, 1960-70년대는 예외적이라고 할 정도로 변화가 있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혁신자치체’가 증가하여 공해문제나 시민참가에 관하여 선구적인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다(篠原一 1977).

주민운동은 1960년대 후반부터 주로 공해환경문제를 계기로 하여 분출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양적으로 감소했다. 고도경제성장기에는 성장의 제모순에 대한 ‘반작용’으로부터 주민운동이 활발했지만, 저성장이나 불황과 함께 정체했다는 해석이 있다(庄司興吉 1989, 193; 中澤秀雄·樋口直人 2004, 142). 1960년대 반공해 반개발을 외친 주민운동은 당시의 지방자치를 크게 변화시킴과 동시에 중앙집권형의 정치구조에 크게 제약을 받기도 했다. 당시

‘혁신자치체’라고 불리던 사회당과 공산당을 기반으로 한 자치단체장은 주민운동의 ‘동맹자’로서 서로 뿔레야 뿔수 없는 관계를 형성했다. 주민운동은 정치와 운동, 그리고 생활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中澤秀雄·樋口直人 2004). 주민운동의 주체는 거주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이었다. 주민운동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이 격렬하게 정치화되었고 권력대항적인 성격을 분명히 했다.

나카자와와 히구치는, 주민운동의 발생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보수지역에서 주민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의외로 운동에 호의적인 혁신지역에서는 항의 이벤트는 많지 않았다. 이것은 혁신지역이 운동의 요구를 빨리 수용하기 쉽기 때문에 항의 이벤트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수지역에서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주민운동이 정치에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항의가 적어진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요구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도 불안정한 정치를 기회로 삼아 주민운동이 뚫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의이벤트가 많다”(中澤秀雄·樋口直人 2004). 정치적 안정 여부가 정치적 기회구조를 결정하는 주민운동 발생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수성이 강한 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특정 사업에 반대하는 생활 ‘방위형’ 주민운동이 많은 반면, 보수성이 약한 자치단체장으로 바뀌면 특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획득형’ 주민운동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혁신자치체란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구 일본사회당)등 혁신 세력이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지방자치체를 의미한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전반에는 반공해, 복지정책, 헌법옹호 등을 이슈로 하여 혁신 자치단체장이 줄줄이 탄생했다. 1947년 제1회 통일지방선거에서 혁신정당은 시장 11명, 지사 4명(이하, 시장수/지사수)을 배출했다.

1951년에는 38/4명, 1955년 60/7명, 1959년 96/5명, 1963년 78/5명, 1967년 78/4명, 1971년 90/3명, 1973년에는 시장 134명, 지사 6명이었다.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1947년 이후 약 10년간은 혁신자치단체장에게 자치체 개혁의 의지는 그다지 없었다. 그들은 단지 사회당과 공산당이라는 ‘혁신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치단체장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자치단체장 개인의 성향이라기보다, 체제변혁과 정권 획득을 위해 국정을 무대로 생각하는 혁신진영에게 지자체는 아직 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3년 아스카타 요코하마시장을 중심으로 혁신진영은 ‘지방에서 중앙으로’라는 전략을 명확히 한다. 고도경제성장정책의 폐해로 공해, 교통, 주택문제 등 도시문제가 격화했으나 보수진영은 뾰족한 대책이 없었고, 혁신진영의 후보에게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가 모아졌다. 이 시기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택된 혁신자치단체장은 그때까지의 노동조합간부형과는 달리 주민운동을 배경으로 한 ‘시민형 자치단체장’이 많았다. 전국의 혁신자치단체장들은 모임을 형성했고 ‘혁신 자치체’로부터 ‘자치체 혁신’이라는 슬로건 하에 시민참가를 정치수법으로 전면으로 내걸었다(サンケイ新聞地方自治取材班 1972, 8-9).

1967년 미노베 도쿄도지사 탄생을 계기로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를 ‘혁신의 폭풍’이 습격했다고 표현될 정도였다. 미노베지사는 이제까지의 혁신 자치단체장과는 달리, 정당당원으로서의 색깔보다는 ‘실천적인 학자이자 인텔리’이자 ‘문화인’의 이미지가 강했다. 미노베 이후의 지방선거는 두 가지 점에서 이전과 달랐다. 첫째, ‘Stop the Sato(당시 수상)’에서 분명하듯이 지방선거가 ‘지방’이 아니라 ‘중앙’ 정책의 차원에서 싸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그리고 혁신진영이 도쿄에서의 성공을 계기로 문화인 후보를 많이 기용되자 선거모체인 사회당과 공산당의 공동투쟁을 위한 ‘밝은 혁신도(부, 현, 시)정’을 만

드는 모임'과 같은 시민조직을 결성하는 선거운동의 패턴이 정착했다.

혁신자치체의 직접민주주의 방식은 아스카타 요코하마 시장의 '시민참가'형에서 미노베도지사의 '대화'형으로 발전되어 갔다. 혁신자치단체장은 보수파 의회 속에서 '혁신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했던 점도 있다. 1만인 집회, 백인위원회, 시민상담실, 시장에게 보내는 편지 등등 다양한 시민참가의 방법이 시도되었으나 시민참가의 성과를 얻기는 그리 쉽지 않았다. 문제는 혁신자치단체장은 시민참가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도시 건설'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안은 시민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잠재하고 있었고 시민참가나 대화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문제였다. 게다가 혁신자치체 역시 개발에 대한 매력을 차마 버릴 수가 없었다. 아직 개발의 맛도 보지 못한 개발후진지역이 전국적인 개발의 붐속에서 개발 선진지역들에서 배워 개발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복지를 위한 개발'이라는 입장으로 나타났다.

더욱더 큰 문제는 정당당원 출신에 비해 혁신정당과의 이념적 공유나 조직적 충성도가 약한 자치단체장을 혁신정당이 통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결국 혁신정당간의 공동투쟁은 균열되고 1973년부터는 혁신정당간의 후보 난립으로 자민당이 '어부지리'를 얻는 현상이 일어났다. 혁신 자치단체장의 출신성분도 다양해져 1정당 1정파의 입장으로 정리될 수 없었고, 지방에서 중앙을 포위해가겠다는 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분열이 가속화되었다.

근본적인 한계는 혁신자치체의 수장들은 '혁신정당'과 주민과의 사이에서 딜레마적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다. 혁신정당의 구속을 받는 자치단체장이 시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시민의 의사를 수용하는 과정은 정당의 의지와 시민의 의지 사이의 갈등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그러나 혁신자치단체장은 혁신정당의 옷을 벗고 시민의 대

표로 거듭날 정도로 ‘혁신’적이지는 못했다. 혁신자치체는 증가했으나 지지도체인 혁신세력간에는 점점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고 혁신자치체는 대항력을 잃고 보수와 구별이 없어졌다. 결정적으로 고도경제성장의 종식은 혁신자치체의 재분배정책으로서의 복지행정을 지속할 수 없게 했다. 주민운동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혁신자치체 또한 대안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 2) 베헤렌의 시민운동

한편, 1960년대를 대표하는 ‘시민’운동이 ‘베헤렌’이다. 1965년 4월 ‘베트남에 평화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쿄에는 1500명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 정당이나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은 개인은 스스로를 ‘시민’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베헤렌 운동은 일본의 운동주체와 그 스타일에서 새로운 기점이 되었다. 베헤렌의 팜플렛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우리들은 보통 시민입니다. 보통시민으로는 회사원이 있고 초등학교의 교사가 있고, 건축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관의 여주인이 있고 신문기자가 있고 꽃집 주인이 있고 소설을 쓰는 사람이 있고,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 소년이 있고, 바로 이 팜플렛을 읽는 당신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 베트남에 평화를!” 이때의 시민은 ‘자발적으로 행동을 선택해가는 개인’, ‘책임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를 가리키고 있다. 베헤렌의 운동 원칙은 세 가지, 첫째, 말을 꺼낸 사람이 시작한다. 둘째,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이리쿵저리쿵 타박하지 않는다. 셋째,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하라(天野正子 1996)였다.

베헤렌의 ‘시민’은 명백하게 ‘국민’에 대치하는 개념이었다. 베헤렌 참여자들은 국가나 정치권력에 대한 경계나 비판속에서 국가와의 거

리를 두고, 주권은 국가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표명했다. 일본의 시민운동 연구자들은 베헤렌을 구미사회의 시민개념이 일본에서 실체로서 등장한 예로 평가했다. 안보투쟁에서도 ‘노동자, 학생, 시민 여러분’이라는 순서가 통용되었고, 그것은 운동의 주체에 대한 기대의 순서이기도 했다. 그때의 시민이란 노동자, 학생을 보완하는 잔여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베헤렌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행동하는 것이 시민의 필요조건이라면 우선 시민이 존재한 후에 노동자, 학생도 시민이 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베헤렌은 종래의 노동운동이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운동과는 확실하게 단절할 수가 있었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게 되자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의 스타일과 끊을 수 없는 방식으로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참여의 의지를 가진 개인이 책임을 질수 있는 만큼 행동하는 독자적인 운동 스타일을 정착시켰다. 베헤렌 운동 참여자는 정당이나 노동조합, 종교단체들과 같은 기성조직에 포섭되지 않는 무당파시민으로서 등장했다. 누구에게나 참여의 자유가 열려있고, 개인의 자발성과 창의가 중시되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개인의 책임은 무거웠다. 시민운동으로서의 베헤렌의 원칙은 그 후의 환경, 공해, 인권문제를 둘러싼 다종다양한 ‘새로운 사회운동’에 계승되었다.

베헤렌은 스스로를 시민임과 동시에 ‘생활자’로 불렀다. 여기서 생활자는 첫째, 운동 주체가 직업 정치가도 평화운동의 전문가도 아니고 ‘운동으로 밥을 먹지 않는’ 정치의 아마추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관념이나 이데올로기로 행동을 규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현장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생활이 있기에 참여는 부분적이었지만, ‘뜻’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활자’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생활자는 절대로 24시간 활동가는

될 수 없으며, 1주일중에 아주 적은 시간밖에 할애할 수 없다. 생활현장을 가진 사람들로써 ‘생활자’를 베헤렌은 ‘보통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즐기는….. ‘보통 사람들’의 생활. 베헤렌이 “보통 사람으로서, 베트남에 평화를!”이라고 외칠 때, 베트남은 추상적인 국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즐기는….. 자신들과 같은 ‘보통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현장을 의미했다(天野正子 1996).

베헤렌의 참여자들은 운동의 과정에서 베트남인을 피해자로 하는 것에 의해 이익을 받고 있는 가해자인 일본인으로서 자신들을 반성하게 되었다. 베헤렌운동의 핵심에는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생활자로서’라고 운동참여자가 말할 때 거기서의 생활자란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했다. 베헤렌의 시민이자 생활자는 일관되게 ‘약한 개인’이란 전제를 유지하며 운동에 참여했다. ‘그냥 인간’이란 사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약한 개인을 의미한다. 시민사회의 인간모델로서 일상생활을 버리고 현세거부적인 금욕을 전제로 자신을 규율하는 ‘강한 개인’을 상정하지 않는다. 베헤렌운동은 약한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시민상, 새로운 생활자상을 찾으려는 운동이었다. 거기에는 인간이 갖는 약함, 애매함, 위험함, 여림에 집착하면서도 거기에서 ‘사람들’의 사상과 행동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사상이 있다. 약한 개인의 생활의 집합으로서 시민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한 그 개인의 약함을 전제로 한 생활자상을 찾아가야 한다(天野正子 1996)는 것이다. 베헤렌 참여자들의 동기가 ‘피해 의식’이 아니라 참여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식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중요하다. 그것은 다음의 생활자 네트워크의 여성들의 참여동기와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3) 생활자의 정치: 주부·여성의 정치

1980년대에 ‘생활자의 정치’ 와 ‘대리인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생활 정치를 대표했던 것은 생활클럽생협을 모체로 한 생활자 네트워크 운동이었다. 100% 여성 참여자로 구성되며 그 배후에는 생협의 남성 리더가 이념적,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했다. 점차적으로 이 조직은 여성들 스스로가 운영하게 되었고 모체조직과도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생활클럽생협 관계자 이외의 사람들도 구성원으로 흡수하기 시작한다.

안보투쟁의 경험을 통해 일본의 혁신정당과 노동운동에 한계를 느꼈던 남성들은 1965년 ‘생활크라브’를 결성하여 운동의 장을 공장에서 ‘지역’으로, 거리에서 ‘일상’으로 전환한다. 그들은 지역에서 청년을 조직하고자 했으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물들지 않은 ‘백지 상태’의 주부들이었다. 고학력 여성이 많았으나 노동시장으로부터는 배제되어 지역에 남겨진 ‘전일제 시민’ 이었다. 그들에게는 노동운동의 경험도 학생운동의 경험도 없었고, 따라서 조직운동의 폐해, 사상운동의 분열과 대립에 대한 상처와 기억도 존재하지 않았다. 혼자 벌여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가장을 남편으로 두고 구태여 남성과 경쟁하면서 힘겹게 사회에서 노동하기 보다는 육아와 지역 활동, 취미활동을 선택한 여성들이었다. 결국 일본에서조차 단 한 세대로 끝난 ‘남성 샐러리맨 여성 전업주부’라는 성별역할분업구조의 시대적 산물이었다. 이 여성들은 피해의식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베헤렌 참여자들과 유사하며 참여를 통해 자신과 사회를 동시에 변화시키고자 했다.

생활클럽생협운동 남성 리더들은 당시 사회당이나 사민련과 관계를

가지면서 혁신정당을 외부에서 개혁할 목적으로 ‘대리인 운동’을 제기한다. 대리인 운동은 생협 여성들의 자발적인 운동이라기보다는 생협 리더의 운동전략에 여성들이 동조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대리’라는 개념은 의회제 민주주의가 ‘대표’라는 이름으로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데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대리인’이란 의회제 민주주의의 ‘대표성’을 최소화하면서 의원을 보낸 시민의 의사를 최대화하는 개념이다.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의회제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대리인 운동의 목표였다.

생활클럽생협은 1977년 도쿄도의회의원 선거에 처음으로 ‘대리인’ 후보를 내보내지만 실패로 끝나고, 1979년 도쿄도 네리마구에서 생협 직원 출신 여성 후보를 내세워 처음으로 당선한다. 그후 1983년에는 카나가와현 카와사키시에서도 대리인이 탄생하고 1987년에는 치바현과 사이타마현등 생활클럽생협이 존재하는 도도부현으로 확대되었다. 현재에는 9개의 도도부현에 150명 이상의 여성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생협과는 별도의 정치조직을 구성하여 지방정치에 참여하고 있으며 생협과는 이슈별로 혹은 인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연대하고 있다. 도도부현별 연합조직이 있고, 기초지자체별로 ‘지역 네트’ 조직을 구성하여 1차적으로는 기초자치체에 의원을 배출하는 운동을 하며 도도부현을 단위로 연계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대리인 운동 센터’로 느슨하게 연대해오다가, 2005년 전국시민정치네트워크라는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생활자 네트워크는 의원수나 회원수로 보았을 때 90년대에 가장 피크를 이루었는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의원수와 회원수는 모두 정체되었고 의원의 재생산구조도 한계에 봉착했다. 생활자 네트워크는 지역에서 새로운 멤버를 부분적으로 흡수하고 있지만 주부여성조직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여성들은 ‘보통의 주부’이자 정치의 아마추어라는 점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규정했다. 이 때의 ‘보통의 주부’란 노동자, 조직활동가, 좌익운동가, 직업적인 정치가, 남성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생활자, 시민’과 동일시되었다. 이들은 지방의회에 의원을 보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생활상의 과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운동 스타일을 취해 왔다. 운동에 필요한 자금은 의원의 세비를 조직에 기부함으로써 충당되고, 의원의 임기를 2기 8년, 혹은 3기 12년으로 제한하여 의원의 직업화, 프로화를 견제했다.

초기의 생활자 네트워크 운동은 각 기초자치체별 생협 조직이 중심이 되어 조합원을 의원으로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지역네트를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합성세계 반대를 위한 직접청구운동’과 같은 직접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통해 조합원들을 운동에 참여시키고, 직접청구의 좌절을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로 부각시켜 의회에 참여하는 운동으로 연결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대리인들은 ‘생활자’라는 이름으로 식품 안전, 비누, 합성세제문제, 환경, 육아 등 ‘부업’의 과제들을 의회에서 제기했다. 이러한 생활과제들은 남성들이 압도적인 지방의회에서 비웃음을 사기도 했으나 행정의 정책화로 이어져 성과를 거두게 된다. 대리인운동의 목적은 생활자, 시민의 의회 참가로 의회를 바꾸고, 그러한 대리인 운동을 통해서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의회의 소수세력으로 존재하면서 의원의 교섭력을 이용하여 행정의 정책으로서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소비생활운동의 경험으로 출발한 생활자 운동은 지역정치에는 참여하지만 국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국정과는 거리를 두었다. 그들의 정치참여가 일상생활에 기반한 정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큰’ 정치와 ‘강한’ 정치에 대해서는 불신과 경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 알레르기’ ‘정치 알레르기’. 정치를 하면서도 특정 선에서는 정치성을 탈각시키는 방식으로 운동 참여자들을 확대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생활자 네트워크의 중심적인 활동가나 의원 경험자들은 자신들의 생활정치가 결국은 국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한편, 이들 여성조직을 지원하는 생협의 남성 리더중에는 여성들을 대상화하면서 지방정치에 대한 참여를 통해 여성들이 의식화되고 의원수의 증가와 더불어 조직력이 강해짐에 따라 국정에의 참여를 시도한다. 남성 리더들에게 있어 생활정치 즉 지방의회 참가는 국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중앙정치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여성들에게 생활정치는 국정과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생활정치의 정의와 관련이 되어 있었다. 이 여성들에게 있어 생활정치란 ‘개인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정치의 변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치’(朴姬淑 2005)를 의미했다. 따라서 생활정치란 자신의 몸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단지 위임하고 신탁하는 관계인 국회위원을 만들어내는 국정 참여는 이 여성들에게는 자신들의 변화의 과정을 통해 지역을 변화시키는 생활정치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국정참여를 둘러싸고 생활자 네트워크내에서는 분열이 일어났고 일부는 국정참여를 강행했으며 일부는 연대조직을 이탈했다. 특히 1996년 민주당 창당과정에 카나가와 네트워크운동이 전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조직내에 커다란 후유증을 남겼다. 그후에는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방식의 국정참가는 하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지자체별 의원의 복수화 및 자치단체장을 배출하는 전략을 취하지만, 이 시도도 실패로 끝난 경우가 많다. 생활자 네트워크의 생활과제는 지역내의 다양한 조직들을 묶어내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후보를 옹립할 만큼의 포용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2005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도쿄생활자

네트워크의 대표를 역임했던 세타가야구의원 출신 오오카와라 마사코가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의원에 당선했다. 이것은 생활자 네트워크가 국회에 진출했다기 보다는 민주당이 생활자 네트워크의 조직력과 지지자들을 민주당의 표로 흡수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생활자 네트워크’는 더 이상 ‘생활자’를 독점할 수 없게 되었다. 생활자 네트워크의 정치적 주제는 다른 ‘시민파’ 의원들과 차이가 없어졌고, 주부여성의 신선한 이미지도 약해졌다. 국정에서의 자민당과 민주당의 양당구조가 형성되어 가면서 지방의회 안에서도 민주당은 물론 ‘시민파’의 다른 후보들과도 경쟁하게 되었다. 2004년 카나가와 네트워크운동은 조직내부의 이견을 조정하는데 실패해서 가장 큰 지역인 요코하마 네트워크와 갈라섰다. 도쿄 생활자 네트워크는 과거에 비해 의석을 잃었고 의원들 중에는 대리인 계약을 해제하고 민주당으로 가거나 무소속으로 옷을 갈아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생활자 네트워크가 생활정치를 대표하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민주당은 생활정치의 주역이 될 수 있는가

2000년대 일본사회에는 그동안 감추어져있던 빈곤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불평등 사회 일본』(佐藤俊樹 2000)이 ‘1억층중류화론’을 부정함으로써 연구자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었고, 한국어로도 번역된 『하류사회-새로운 계층집단의 출현』(三浦展 2005)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OECD의 최근조사(2000년)에 의하면, OECD가맹국 평균 8.4%에 비해, 일본의 빈곤률은 13.5%로 미국의 13.7%에 이어 두번째이다. 일본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연간 자살자수가 3만 명을 넘고

있다. 그리고 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 8월 현재 완전실업률은 5.5%이다. 일본의 완전실업률은 1959년 2.2%, 1969년 1.0%, 1979년 2.1%, 1989년 2.2%, 1999년 4.7%였다. 노동력조사에 의하면 파트, 아르바이트, 파견·계약·촉탁과 같은 비정규노동자의 비율이 모든 연령에서, 그리고 남녀 공통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15-24세의 청년 비정규노동자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소위 ‘프리터’의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프리터(자신의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면서 생활의 자유를 즐기는 사람들)’나 ‘파라사이트 싱글(결혼하지 않고 부모에 기생하는 젊은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해서 자기 선택과 책임을 강조해오던 경향에서 그들을 working poor로 재인식하게 되었다. 홈리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수립되었고, 집이 없어 인터넷카페를 전전하는 ‘네티카페 난민’도 사회적으로 인지되기 시작했다.

2009년 8월30일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308의석을 획득하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획득의석수 최다기록으로, 1986년 자민당의 300석(정수512석)을 능가했다. 소선거구 221의석도 최다였다. 의석점유율은 64.2%로서 1960년 자민당의 63.4%를 넘어서 전후 최고였다. 비례구 득표에 있어서도 2,984만 표로서 1996년 소선거구제 비례대표 양립제 이후 2005년 자민당의 2,589만 표를 상회했다. 투표율도 69.28%를 기록해서 96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두말이 필요 없는 정권 교체였다.

「아사히신문」 8월31일자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궤멸적으로 패배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민당지지층은 2005년보다 줄어들었지만 민주당지지층보다는 여전히 많다. 그러나 자민당지지층 가운데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이 2005년보다 상승했다. 그리고 공명당은 자민당지지층의 표가 없으면 당선되기 어려운 선거구에서 대부분 민주당에 의석을 내주었다.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지방표

의 열세, 즉 정촌에서의 열세를 민주당은 모두 만회했다. 민주당은 도쿄 23구와 정령지정도시(인구 50만 이상)는 물론, 그 외의 시, 그리고 정촌 모든 지역에서 자민당을 앞질렀다.

민주당의 특징으로는 첫째, 의원개인의 판단에 의한 참여로 당의 통제보다는 자율적인 의원의 집합체로서 의원 정당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둘째, 노조의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노동조합의 연합조직인 ‘연합’이 1996년 제1민주당결성 당시에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제2민주당 결성시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민주당의 기원은 1996년 9월에 결성된 구민주당(제1민주당)이다. 제1민주당의 이념은 첫째, 관료지배의 타파와 민주주의의 철저. 둘째, 자민당류의 이익정치를 부정하고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추구. 셋째, 대외정책에서의 시빌리언 파워, 소프트 파워노선이다.

2007년 참의원선거에서 거둔 민주당의 승리는 ‘생활 제1’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보장제도의 재건, 지역커뮤니티의 재생, 농업의 재생등을 내건 자민당과의 차이를 연출했기 때문이다. 선거 승리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라진 연금기록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불만이였다. ‘생활제1’이라는 슬로건이 사회보장제도의 충실이라는 이미지로 발전한 것도 연금기록사건 덕택이였다.

2009년 정권교체 후 민주당이 맨 처음 선언한 것은 ‘탈관료의존’으로서 관료주도를 정치주도로 바꾼다며 관료의 기자회견이나 취재대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하토야마 수상은 2009년 14조 엔의 보정예산에 대한 수정을 각 성·청에 요구했다. 2010년부터 창설하기로 약속한 ‘어린이 수당’(월액 2만 6천 엔을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 내년에는 반액지급), 공립고등학교의 실질적인 무상화, 고속도로의 무료화 등을 위해 7.1조 엔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올 4월에 폐지된 생활보호를 받는 한 부

모가정에 지급되던 ‘모자가산’을 12월까지 부활시킬 것을 분명히 했다. 약 60억 엔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구마모토현 안바댐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중지를 선언했다. 국토교통성은 안바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43개의 댐 사업에 대해 계획을 수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매니페스토에서 안바댐의 건설 중지를 약속했고 정권교체 후에도 그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나 주민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지역으로 찾아가던 국토교통대신을 지역주민들은 만나주지도 않았다. 총사업비 4600억 엔, 지금까지 비용을 부담해온 댐 수혜지 1도5현에 대해 정부는 이미 집행된 1460억 엔을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들의 생활재건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자민당의 정치무능에 대한 반감이 민주당의 승리로 이어졌으나, 민주당이 정책을 통해 그 기대에 응답할 만큼 성과를 낼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민주당은 압승에도 불구하고 선거전의 약속대로 사민당과 국민신당과 연립정권을 형성했으나 세 당 사이의 정책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현재까지 3당이 확인한 공동정책은 소비세율 인상의 보류, 우정사업의 4분사화의 수정, 어린이 수당의 창설, 고교교육의 실질 무상화, 후기고령자의료제도와 장애자자립지원법의 폐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의의 법제화, 농가에 대한 호별소득보상제도의 실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회피 방지법 제정 등이다. 외교와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재협의 사항으로 남겨둔 상태이다. 또한 민주당내에 의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의 신의원의 생각과 민주당의 매니페스토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에 거는 기대는 여전히 크지만 민주당이 현재의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잃어버린 90년’에 나타난 생활정치에 대해 이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원자력발전소 반대, 댐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는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비약적으로 늘어난 사회 서비스형 비영리 시민 사업체는 생활정치가 단지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와의 관계속에서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생활정치는 시민 사회와 시민 경제 그 자체를 재구성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과 민주당이 어떻게 만나고 그들을 어떻게 지원하며 거시적인 정책으로 묶어낼 수 있을지에 민주당의 가능성이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생활정치란 무엇인가? 생활정치는 정당정치와 대결구조 속에서 발전해오지만, 실은 정당정치와의 교섭과 역할분담을 통해서 과제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생활정치는 의회제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출발하지만 그렇다고 의회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성립할 수는 없다. ‘생활’은 참으로 다양하고 풍부하며, 때로는 혁신적이기도 하고 보수적이기도 하다.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용납했던 것도 ‘생활’ 때문이었고, 민주당으로 정권을 바꾼 것도 ‘생활’ 때문이다. 그렇기에 ‘생활’을 내세우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생활 정치가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라고 한다면 그 방법과 내용은 무수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생활정치가 자신의 생활의 스타일을 바꾸어 나가면서 사회를 바꾸어나가는 정치라고 한다면, 생활정치의 주역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 모두에게 열려있다. 지금의 생활정치에서 가장 견지해야 할 점은 바로 ‘연대’의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생활문제와 공동체의 과제를 연결하면서 함께 사는 길을 찾아가는 것, 그러한 연대의 시점에 선 정책을 국민과의 합의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가가 민주당의 승부점이라고 여겨진다.

(2009년 9월 10일 접수, 2009년 11월 16일 채택)

## 참고문헌

- 天野雅子(아마노 마사코). 1996. 『「生活者」はだれか－自律的市民像の系譜』.  
中公新書.
- 石川眞澄(이사와 마사미). 2004. 『戦後政治史 新版』. 岩波書店.
- 岩田正美(이와타 마사미). 2008. 『社會的排除－參加の欠如・不確かな歸屬』.  
有斐閣.
- 小林良彰(코바야시 요시아키). 1997. 『現代日本の政治過程－日本方民主主義  
の計量分析』. 東京大學出版會.
- 三浦展(미우라 아쓰시). 2005. 『下流社會 新たな階層集團の出現』. 光文社新書.
- 宮本太郎(미야모토 타로). 2008. 『福祉政治－日本の生活保障とデモクラシー』.  
有斐閣.
- 中澤秀雄・樋口直人. 2004. 「社會運動と政治－政治的機械構造と住民運動」.  
大畑裕嗣・成元哲・道場新信・樋口直人編. 『社會運動の社會學』. 有斐  
閣選書, 140-155.
- 오사와 마리(大澤眞理). 김영 역. 2009. 『현대일본의 생활보장체제』. 서울: 후마  
니타스.
- 朴姬淑. 2005. 「地域ネットワーク運動における生活政治の擴大と障害」, 『ソ  
シオロゴス』29号, ソシオロゴス編集委員會, 163-179.
- サンケイ(산케이)新聞地方自治取材班. 1974. 『革新自治体 その構造と戦  
略』. 學陽書房.
- サンケイ新聞地方自治取材班. 1973. 『革新自治体』. 學陽書房.
- Scalapino Robert A. & 升味準之輔(마쓰미 준노스케). 1962. 『現代日本の政党と  
政治』. 岩波書店.
- 重森曉(시게모리 아키라). 1992. 『分權社會の政治經濟學 産業自治と生活者民  
主主義』. 青木書店.
- 篠原一(しの하라 하지메). 1977. 『市民參加』. 岩波書店.
- 篠原一編. 1985. 『ライブラリーポリティクス』. 總合勞働研究所.

辻中豊(쓰지나카 유타카). 1988. 『利益集團』. 東京大學出版會.  
山口二郎(야마구치 지로). 2009. 『政權交代論』. 岩波書店.

## The Problem and Vision of the Life Politics in Japan

*Hee-Sook Park*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process and problem of the 'life politics' in Japan. After the World War II, Japanese conservatism to life enabled a long regency of Liberal-Democratic Party. However, the life politics appeared around the residents' movement and the progressive local government in the 1960's. "Peace for Vietnam!" movement was different from party politics or ideal movements and showed universality of the life politics. Moreover, after 1980's, "Seikatsusya politics" which was a style of citizen's participation to the local assembly faced the heyday in 1990's, but it has stagnated in 2000's. On the other hand, the theory to the life politics includes 'lively politics' and 'Seikatsusya democracy' in the 1980's, 'Seikatsusya politics' in the 1990's and 'life politics' over the life security system in the 2000's. Recent success of Democratic Party means joint between life politics and party politics, but the capacity in solving the life problem of the Democratic Party is opaque.

Key words: life politics, Seikatsusya Politics, Seikatsusya Democracy, lively politic